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54호 (2018-10)
발행일 2018. 10. 15.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¹⁾



노대명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우리 사회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는 개별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생활 수준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음. 근로빈곤층은 부채 상환 부담에 따른 박탈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 부채 증가 위험에 직면해 있음.
- 기존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창업 지원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에게 부채 탈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 개편 또한 필요함.

1. 들어가며

■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증가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가계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가 부각됨.
 - 가계부채 총액은 2002년 465조 원에서 2017년 1451조 원으로 15년간 약 세 배 증가함.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같은 기간 61.0%에서 83.9%로 증가한 것임. 2017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5.9%로 높은 수준임.
-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노후 불안에 따른 부동산 투자, 주택 경기 활성화를 원하는 이해관계집단, 부동산 대출정책 등으로 매우 복잡적임.
-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저축 감소와 내수 위축을 낳고, 부동산시장 교란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부실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함.
- 대안으로 신용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최근 외부 경제 환경 또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 정책 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1) 이 글은 노대명,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휘(2017).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 글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빈곤층의 삶에 매우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부채 상환 여력과 부채 증가가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그중에서도 가계부채를 감수할 유인이 크고 상환 잠재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의 실태와 파급효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2.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징: 취업 특성과 가구 여건을 중심으로

- 2015년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별 가구 및 인구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가구 및 인구 중 빈곤 가구는 22.6%, 빈곤층은 16.3%로 추정됨.
 - 전체 근로 연령 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는 13.2%, 빈곤인구는 11.0%로 추정됨.

〈표 1〉 소득계층별·가구 유형별 가구 및 가구원 비율(2015년 기준)

(단위: %)

	전체 가구		근로 연령 가구주 가구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빈곤층	22.6	16.3	13.2	11.0
중하층	32.6	33.8	34.4	34.5
중상층	22.6	25.3	26.0	27.3
상위층	22.2	24.7	26.4	27.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1)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이하(빈곤층), 51~100%(중하층), 101~150%(중상층), 151% 이상(상위층)으로 구분함.

2) 근로 연령 가구주는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해 20~64세로 통제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 근로빈곤층은 가구 여건과 취업 상태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짐.
 - 근로빈곤층은 한부모 가구(20.7%) 및 월세 가구(31.8%)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가량임.
 - 근로빈곤층의 취업 상태를 보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만으로 구성된 1인 이상 취업자 가구가 41.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23.6%, 상용직 1인 취업 가구가 22.7%, 상용직을 포함한 취업자가 2인 이상인 가구가 11.8%를 차지함.

〈표 2〉 근로빈곤 가구의 취업자 구성과 가구 여건(2015년 기준)

(단위: 명, %)

		소득계층 구분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가구 여건	평균 가구원 수	2.6	3.2	3.3	3.3	3.2
	1인 가구 비중	26.5	18.0	15.4	17.2	17.9
	한부모 가구 비중	20.7	11.2	9.1	9.2	12.7
	월세 가구 비중	31.8	20.1	10.3	5.7	15.3
	학생 보유 가구 비중	49.0	60.5	59.3	54.2	56.9
	평균 근로 연령층 수	1.8	2.2	2.3	2.5	2.2
	평균 취업자 수	0.9	1.4	1.7	1.9	1.6
가구 내 취업자 구성	취업자 없음	23.6	3.4	1.5	1.0	5.5
	기타 취업자 1인 이상	41.9	29.3	16.8	10.6	23.6
	상용직 1인	22.7	38.1	33.2	25.7	31.5
	상용직 1인+기타 1인 이상	8.3	16.8	20.2	17.6	16.5
	상용직 2인	2.7	9.7	20.7	31.3	16.6
	상용직 2인+기타 1인 이상	0.4	1.9	4.6	6.1	3.4
	상용직 3인 이상	0.4	0.7	3.0	7.8	3.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근로 연령 가구로 통제된 분석 결과임.

2) 주 취업자는 상용직과 고용주를 지칭함. 기타 취업자는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 종사자를 지칭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가구와 가구원 데이터를 머지.

3.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문제점

■ 근로빈곤층의 취약한 취업 상태와 낮은 소득은 부채 발생의 근본 원인임.

○ 근로빈곤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1100만 원)은 전체 가구(4628만 원) 대비 23.8%에 불과함.

○ 하지만 근로빈곤 가구의 평균 부채 총액(5647만 원)은 전체 가구(7544만 원)의 74.9% 수준임.

- 부채 구성을 보면 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 근로빈곤 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 재산 및 부채

(단위: 만 원, %)

		소득계층 구분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가구 소득	경상소득	1,525	3,468	5,711	10,397	5,667
	(평균 대비 %)	(26.9)	(61.2)	(100.8)	(183.5)	(100)
	근로소득	753	2,536	4,245	7,021	3,955
	사업소득	424	727	1,178	2,652	1,326
	재산소득	58	54	122	541	205
	이전소득	289	150	165	183	181
	- 공적이전소득	214	122	134	159	147
	- 사적이전소득	76	29	31	24	34
가처분소득	1,100	2,831	4,683	8,548	4,628	
(평균 대비 %)	(23.8)	(61.2)	(101.2)	(184.7)	(100)	

		소득계층 구분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자산과 부채	자산 총액	18,952	23,105	36,289	68,902	38,373
	부채 총액 (평균 대비 %)	5,647 (74.9)	5,093 (67.5)	7,275 (96.4)	11,792 (156.3)	7,544 (100)
	금융부채	4,458	3,966	5,486	7,787	5,456
	- 담보대출	3,569	3,164	4,434	6,483	4,443
	- 신용대출	710	643	862	1,161	848
	- 신용카드 관련 대출	136	64	69	32	66
	- 외상·할부 미상환액	39	94	118	110	97
	- 갯돈 탄 후 불입금액	3	1	3	1	2
	임대보증금	1,189	1,127	1,789	4,005	2,087
	순자산액 (평균 대비 %)	13,305 (43.2)	18,013 (58.4)	29,014 (94.1)	57,111 (185.3)	30,829 (1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 근로빈곤층은 낮은 신용에 따른 고금리 등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 근로빈곤 가구의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은 1256만 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를 갚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말해 줌.
-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은 연체와 채무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 12.9%의 두 배에 이르고, 연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감소라고 답하고 있음.²⁾

〈표 4〉 근로빈곤 가구의 부채와 상환 부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만 원, %)

		소득계층 구분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부채 보유 여부	보유	58.7	70.7	74.6	75.1	71.3
	미보유	41.3	29.3	25.4	24.9	2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 (가처분소득 대비 %)		1,256 (114.2)	1,217 (43.0)	1,815 (38.8)	2,508 (29.3)	1,750 (37.8)
연간 지급이자		307	222	270	384	291
연간 상환액		949	995	1,546	2,124	1,46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조달임.

- 근로빈곤층은 가처분소득이 낮아 이미 교육비와 식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임.
 -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층 중 식품외식비를 줄이는 가구가 45.1%로 중하층 36.1%, 중상층 27.8%, 상위층 18.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³⁾
-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조달을 위해 추가 부채를 지는 가구가 60.1%에 달한다는 점임.

2) 노대명,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휘. (2017).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9.

3) 노대명,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휘. (2017).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9.

- 특히 생활비 조달을 위해 추가적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응답이 38.2%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임.

〈표 5〉 소득계층별 부채 증가 원인

(단위: %)

	소득계층 구분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소계	근로빈곤층	노인빈곤층				
거주 주택 마련	8.7	9.1	7.3	17.2	28.5	28.7	19.5
거주 주택 외	0.7	1		5	12.7	14.9	7.3
전·월세 보증금	9.8	9.8	9.7	9.8	7.6	8.1	9
증권 투자 자금					0.5		0.1
부채 상환	8	7.3	10.2	7.6	5	3	6.4
사업 자금 마련	8.3	9.1	5.6	9.3	6.6	8.6	8.3
결혼 자금 마련	1.4	1.8		4	8	7.8	4.9
의료비 마련	12	6.7	29.2	3.1	0.9	0.7	4.4
교육비 마련	12.2	15.2	2.6	18.3	18.6	17.5	16.7
생활비 마련	36.9	38.2	32.7	22.3	11.1	6.1	20.8
기타	2	1.8	2.6	3.4	0.5	4.6	2.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금융부문> 자료(2015년 기준).

- 가계부채의 증가는 근로 연령층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함.
 - 근로 연령 가구의 가계부채는 근로빈곤층 비율을 11.0%에서 26.4%까지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계부채에 따른 상환 부담으로 소비 제약이 심화되고, 일부 가구에서는 생활 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 줌.

〈표 6〉 가계부채 관련 지출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

(단위: 전체의 %)

모델 1 → 모델 2		모델 2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전체
모델 1	빈곤층	11.0				11.0
	중하층	10.1	24.4			34.5
	중상층	3.3	7.7	16.3		27.3
	상위층	2.0	1.7	5.1	18.5	27.2
	전체	26.4	33.8	21.3	18.5	100.0

주: '모델 1'은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 '모델 2'는 가처분소득에서 부채 상환액(원금+이자)을 제한 소득 기준 계층.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4.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오해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기존의 이론들은 항상소득 또는 생애주기별 소득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부채를 늘려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

하는 채무자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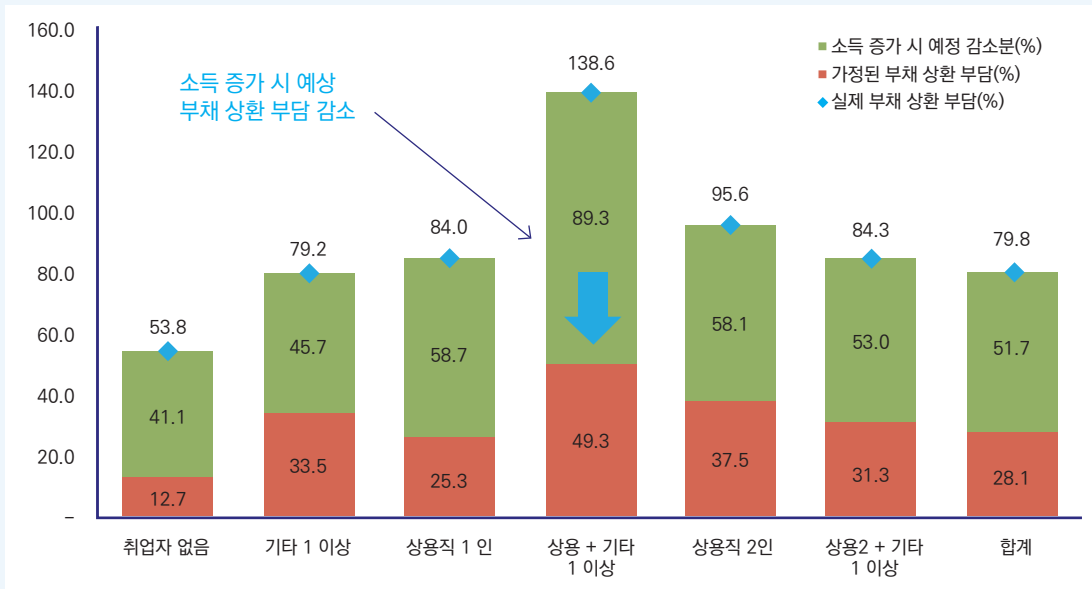
- 하지만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는 삶의 많은 순간에 뜻하지 않게 부채를 지게 되거나 의지적으로 부채를 감수하게 되는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의지적으로 부채를 감수하게 되는 조건이란, 예를 들면 가족의 질환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채를 지게 되는 상황 등을 가리킴.
- 이는 근로빈곤층이 저축과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열악한 취업 상태와 가구 여건에 따른 측면이 강하고, 이들이 가계부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함.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의 이상과 현실

- 이론적으로 근로빈곤층이 가계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미취업 가구원의 취업과 기존 취업자의 더 나은 일자리 진입을 통한 소득 증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만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근로빈곤층의 부채 상환 부담은 크게 감소하여 부채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용이할 것임.
 - [그림 1]은 근로빈곤층이 동일한 취업 유형을 가진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평균 64.8%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 줌.

[그림 1] 근로빈곤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과 소득 증가에 따른 부담 감소 규모

(단위: 가처분소득 대비 %)



주: 실제 부채 상환 부담은 근로빈곤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이며, 가정된 부채 상환 부담은 가처분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의 부채 상환액 비율임. 그리고 예상 감소분은 그 차이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년 자료(2015년 기준).

■ 하지만 근로빈곤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기에는 조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함.

- 근로빈곤층은 종사상지위 측면에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 위험이 큰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확률도 낮다는 특성을 보임.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 격차 그리고 차별 등의 문제 또한 근로빈곤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 저학력자와 여성 취업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로빈곤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부모 가구,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가 직면한 취약한 돌봄 여건은 단순한 취업 연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 줌.

■ 2014년 이후 진행된 신용 축소가 근로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정부의 신용 축소 정책은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임.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기 힘든 집단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고령층 퇴직자 등 많은 구직자들이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그것임.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인 창업 수요가 신용대출 등 새로운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줌.

○ 신용 축소와 분할 상환 방식이 확대되면서 근로빈곤층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문제임. 이는 저소득층의 부채 총액이나 부채 보유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특히 생활비) 감소와 추가 부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밖에 저소득층의 낮은 신용도에 따른 높은 금리 부담도 부채 탈출의 장애 요인임.

○ 최근 정부가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문제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빈곤층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불리한 상환 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특히 빈곤층은 신용카드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채 금액은 낮지만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임.

- 신용카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35~54세 연령층일수록, 전세나 월세 거주자일수록 대출액이 큰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신용카드 대출이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의 사건과 맞물리는 경우, 부채 상환 연체와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있음.

■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는 가계부채 발생과 증가의 원인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 뿐 아니라 조건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해 줌.⁴⁾

○ 응답자 중 일부는 질병과 배우자의 부채 등으로 과중채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여성 과중채무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채가 이혼의 사유이자 부채 발생의 원인으로 발전하고,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취업을 어렵게 하여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음.

○ 가계부채가 근로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약이 불가피하고, 이는 일차적으로 교육비와 생활비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줄이거나, 그것을 지출하는 경우 다른 소비지출에서 결핍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임.

○ 부채 탈출은 근로빈곤층 본인의 자립 의지 외에도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지인, 지원단체 등의 사회적 지지망은 근로빈곤층의 부채 탈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에 비해 우호적인 대출이나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의 물적 지원 외에도 심리적 지지망을 포괄하는 것임.

4)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2017년 9월 4일(월)부터 9월 19일(화)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국내의 대표적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의 협조를 통해 사전 동의를 얻은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5. 나가며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정책 외에도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이 소득 증대를 통해 부채 탈출을 촉진하는 근본 대책이라면, 금융정책은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을 합리화하는 대책, 사회보장제도는 가계부채에 따른 생활상의 충격을 완화하고 추가적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지난 10여 년간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향후 대책은 근로빈곤층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근로빈곤층의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내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특히 서비스업종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미취업 가구원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여 가구 내 취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함.
 - 근로빈곤층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부채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적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급여 신청 창구를 과중채무자 상담 및 지원 창구와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과중채무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와 교육 그리고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여나 서비스 수급의 배제 사유가 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함. 예를 들면, 공공임대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자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그것임.
 - 이와 같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패자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시장 경쟁에서 낙오되면 자신의 재도전에도 낙인이 찍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마저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이나 도전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집필자 노대명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044-287-81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